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목 차>

### 1.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 관련 필요사항 규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류성재
	담당부서 (과)	자본시장과		직급	사무관
	국장	김정각		연락처	02-2100-2652
	과장	변제호		이메일	dapasj@korea.kr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 관련 필요사항 규정		
	2.규제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3항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3호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3.11.~2021.3.3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교류를 적절히 차단하도록 차이니즈월 규제 개선 → 이와 관련하여 개정 법 위임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준수 의무사항 규정		
	7.규제내용	○ 내부통제기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 및 지원부서를 설치하고,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증권회사 ○ (이해관계자) 투자자		
	9.규제목표	○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가 충실히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사항 없음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기타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① ~ ② (생략)  ③ 법 제4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내부통제기준 적정성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기준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하는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의 선임 및 지원부서 설치·운영(해당 임원 및 지원부서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를 포함한다)  2. 점포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에 대한 공시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삭 제>
제51조(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의 차단) ① 법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이하 생략)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교류를 적절히 차단하도록 정보교류 차단규제 개선(자본시장법 개정, '20.5월)

※ “금융투자업 차이나이즈 월 규제 개선방안” 발표('19.5월)

⇒ 개정 법의 위임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준수 의무사항 규정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 관련 필요사항 규정
	내용	○ 내부통제기준 관련 총괄 임원 및 지원부서 설치 ○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 공시

##### ○ 규제대안의 비교

1) 현행유지안 : 정보교류차단 관련 의무 미부여

2) 규제대안1 : 내부통제기준 관련 총괄 임원·부서 설치 및 동 기준 주요 내용 공시 의무화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관계 회사(4개) 등이 참여하는 ‘차이나이즈월T/F’를 구성·운영('20.11~'21.2월)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수렴 예정

### 3. 규제목표

- ☐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가 보다 충실히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 해소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그간 자본시장법령에서 세세히 규정해 오던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획기적으로 개선(규제 완화)하되,
- 내부통제기준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 마련 →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충족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해외사례 :

- (임원·부서 지정·설치) 미국·일본에서 동일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골드만삭스·Societe Generale·도이치뱅크 등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동 규제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운영하고 있음
-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 공시) 일본에서 동일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Societe Generale에서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 공시 중

#### ○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 III.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준용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 등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동의한 사항으로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규제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만큼, 행정적 집행 가능성 충분

####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집행에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 특히, 내부통제기준 총괄 임원 선정 관련하여 동 임원의 준법감시인/소비자 보호총괄책임자(CCO)간 겸직을 제한하지 않는 만큼, 인건비 발생도 거의 없음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경과

- ☐ ‘차이니즈월T/F’ 회의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음

### 2. 향후 계획

-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 시행할 계획

### 3. 종합결론

- ☐ 내부통제기준을 전담하는 임원·부서를 두어, 내부통제기준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조직적 토대를 구축하고,
  - ☐ 대외적으로 동 내용의 주요 내용을 공시토록 하여 시장으로 부터 내부통제수준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 ⇒ 이해상충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입이 타당하다고 판단